

# 인구 급감...100년 뒤 광주 35만명·전남 49만명

## 감사원 인구구조변화 대응 보고서

전국 인구 1510만 명으로 줄어

전남 65세 이상 비율 85%

청년층 수도권 쏠림 현상 지속

229개 시군중 221곳 '소멸위험'

저출산·고령화가 지금처럼 지속되면 국내 인구가 꾸준히 감소해 96년 후인 2117년에는 1510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가운데 광주시의 인구는 35만명으로, 전남은 49만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 인구 148만명, 전남도 18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96년 뒤에는 246만 명의 인구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 같은 인구 감소 추세에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소멸 현상도 가파라질 것이라는 전망돼 지역불균형 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98명(2018년 전국 합계출산율) 등이 지속될 경우 국내 인구는 지난 2017년 5136만명에서 2047년 4771만명, 2067년 3689만명, 2117년 151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50년 후인 2067년까지 장래 인구추계를 했지만, 100년 후인 2117년 인구추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 감소와 함께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탓에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인구 감소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전남 등 13개 시도에서 30년 후인 2047년에는 최대 23.2%의 인구가 감소하고, 50년 후인 2067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인구가 최대 44.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6개 시도에서 30%를 초과하는 등 인구 급감과 급격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가운데 광주시는 2017년 기준 150만명에서

## ■ 시·도별 총인구 및 구성비 (2017~2117년)

(단위:만명)

구분	총인구			
	2017년	2047년	2067년	2117년
전국	5,136	4,771	3,689	1,510
서울	977	813	629	262
부산	342	263	191	73
대구	246	196	142	54
인천	292	288	228	95
광주	150	123	91	35
대전	153	129	99	41
울산	116	94	68	26
세종	27	58	54	24
경기	1,279	1,358	1,065	441
강원	152	144	114	48
충북	161	160	127	53
충남	215	226	183	78
전북	183	154	118	48
전남	180	158	122	49
경북	268	234	176	70
경남	334	296	219	85
제주	63	77	63	27
수도권	2,548	2,460	1,921	798
중부권	708	717	578	243
호남권	575	511	394	160
영남권	1,306	1,083	796	309

(자료: 현 수준의 출산율, 중위 수준의 사회적 이동이 지속된다는 가정으로 통계청 추계)

2047년 123만명, 2067년 91만명, 2117년에는 35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17개 시도 중 부산과 대구, 울산에 이어 가장 많은 인구 감소 폭을 보이고 있다.

전남은 2017년 180만명에서 2047년 158만명, 2067년 122만명, 2117년 49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전남은 2117년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84.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고령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047년에는 157개, 2067년 216개, 2117년 221개가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예측되

는 등 장기적으로 초고령 인구 중심사회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17년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고흥과 보성, 함평, 신안 등을 비롯해, 30년 뒤인 2047년에는 구례, 진도 등이 전국 222개 시·군 중 미래 소멸위험지수 상위 20위 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시의 경우도 2047년에는 북구와 서구 등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진입될 것으로 보이며, 동구와 남구는 고위험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2117년에는 서울에선 강남과 광진, 관악, 마포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고, 지방에서는 광주 광산과 부산 강서, 대전 유성 등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군에 들어간다. 인구소멸 위기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8개 지역은 대학이나, 학군, 신도시, 일자리, 산업·연구개발 중심지 등의 강점으로 젊은 세대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 2000억원이 투입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경우, 공급대비 계약비율이 51%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주거면적이 대부분 36㎡(10평)으로 비좁고, 신혼부부 생활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입지 요인 등으로 분석했다.

또한, 육아휴직자는 통상임금 대비 45.6%, 출산 휴가자는 68.2%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장기적으로 임금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아 학비 지원사업의 경우도 정부가 2013년부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보육·교육(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유치원의 방과후 과외비 등이 인건비 인상과 수요 증가 등으로 학부모의 지출비용이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저출산 문제는 청년층의 사회적 이동, 수도권 집중 현상과 관련이 있었다"면서 "그동안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에 주력했던 저출산 대책이 지역인구 불균형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심도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민간기업의 혁신도시 이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확대"

국민청원 4주년 직접 답변

"난임 치료비 지원도 늘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접종 대상을 현행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약속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다. 하지만 최대 60만원에 달하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

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 비용은 한 번에 300만~500만원에 달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가 올린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라며 올해 상반기 보건소 간호 인력을 1273명 증원한 데 이어 앞으로도 인력 확충은 물론 근무환경·처우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택배기사들에 대한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또 '사회 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이재명 26%·윤석열 19%·이낙연 10%

4개 기관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이 지사는 전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26%로 선두

를 지켰다.

국민의힘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주와 같은 19%였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10%를 나타냈다.

이밖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4%),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 유승민 전 의원·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원희룡 전 제주지사(2%) 순이었다.

내년 대선의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의 33%가 이재명 지사를 꼽았다. 윤석열 전 총장은 26%였고, 이낙연 전 대표가 7%로 뒤를 이었다.

진보 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이 지사가 33%, 이 전 대표가 17%로 나타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이 3%로 집계됐다. 보수 진영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 25%, 홍준표 의원 12%, 유승민 전 의원 11% 순이었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교육 청림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 The 청림학교이면 **다** 행복해요!

시민과 함께 청림한 광주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